

2014. 6.23 최초 배포
2014. 9.23 1차 개정
2015. 6. 1 2차 개정
2016. 3. 7 3차 개정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길라잡이로서 해당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6. 3.

국 토 교 통 부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목 차 >

제1장 총칙	1
제2장 활성화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2
제3장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	3
제4장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절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 절차	5
제2절 현황 진단	8
제3절 활성화계획의 목표 설정	11
제4절 핵심 콘텐츠의 발굴	11
제5절 단위사업의 시행 계획	12
제6절 도시계획 조치	18
제7절 자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20
제5장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2
제6장 활성화계획의 변경 및 기타사항	23
부 록	25
붙임1 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도	25

제1장 총칙

- 1-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유형)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은 과거 행정, 업무, 상업 등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했던 원도심 지역 등에 대하여 행정·업무, 상업, 문화·관광, 주거 등 기능을 증진하고 상주·유동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 조치를 결합하여 시행하는 중심시가지형과 근린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3. (활성화계획 수립 대상) 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 중 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1-4.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한다.

1-5.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활성화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시점으로 하고, 목표년도는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한다.

1-6. (다른 계획과의 관계) 활성화계획은 법에 따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의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활성화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2-1. (융·복합 계획의 수립)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이용, 건축, 도시계획, 환경, 방재 등 물리적 사업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경제·산업,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융·복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실천계획의 수립)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 뿐 아니라 개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체를 발굴·선정하여야 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립하도록 한다.

2-3. (양방향 계획의 수립)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주민 참여 활성화)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워크숍·세미나 등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소식지 제작 등 홍보를 시행하여 주민·상인 등의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

3-1. (사업총괄코디네이터)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사업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활성화계획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팀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2. (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활성화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대한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겸임한다.

③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현장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력과 비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3-3. (주민·상인협의체의 구성)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주민·상인 등 대표를 발굴·육성하여야 하고, 발굴·육성된 주민·상인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상인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상인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4. (행정협의회)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활성화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 간의 협의 및 사업간 조정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소속으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행정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③ 행정협의회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 3-5.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활성화계획의 목표 설정, 추진 전략의 수립, 단위사업의 확정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대표, 관계 부서 및 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공동으로 맡는다.
- ③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3-6. (추진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및 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선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4장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절 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 4-1-1. (주요 내용) 활성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목차 및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1. 활성화지역의 공간적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일반 현황
2.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계획
3. 지역 현황 진단
 - 가. 대상지역의 쇠퇴 양상 및 원인 진단
 - 나. 대상지역 내 자원 조사 및 잠재력 분석
 - 다. 대상지역 내 각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 조사
 - 라. 대상지역 내 활동 중인 주민 조직·시민단체 등 현황 조사
4. 목표·전략의 수립 및 단위사업 시행 계획 확정
 - 가.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의 발굴
 - 다. 핵심 콘텐츠를 토대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 라.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위한 계획
 - 마.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 바. 사후 운영 관리 주체 및 방안
5. 활성화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4-1-2. (계획 수립 절차) 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현장지원센터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팀, 주민·상인 협의체 등이 구성되는 대로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지역의 쇠퇴 양상 및 원인, 잠재력 및 자원 등에 대한 현황 진단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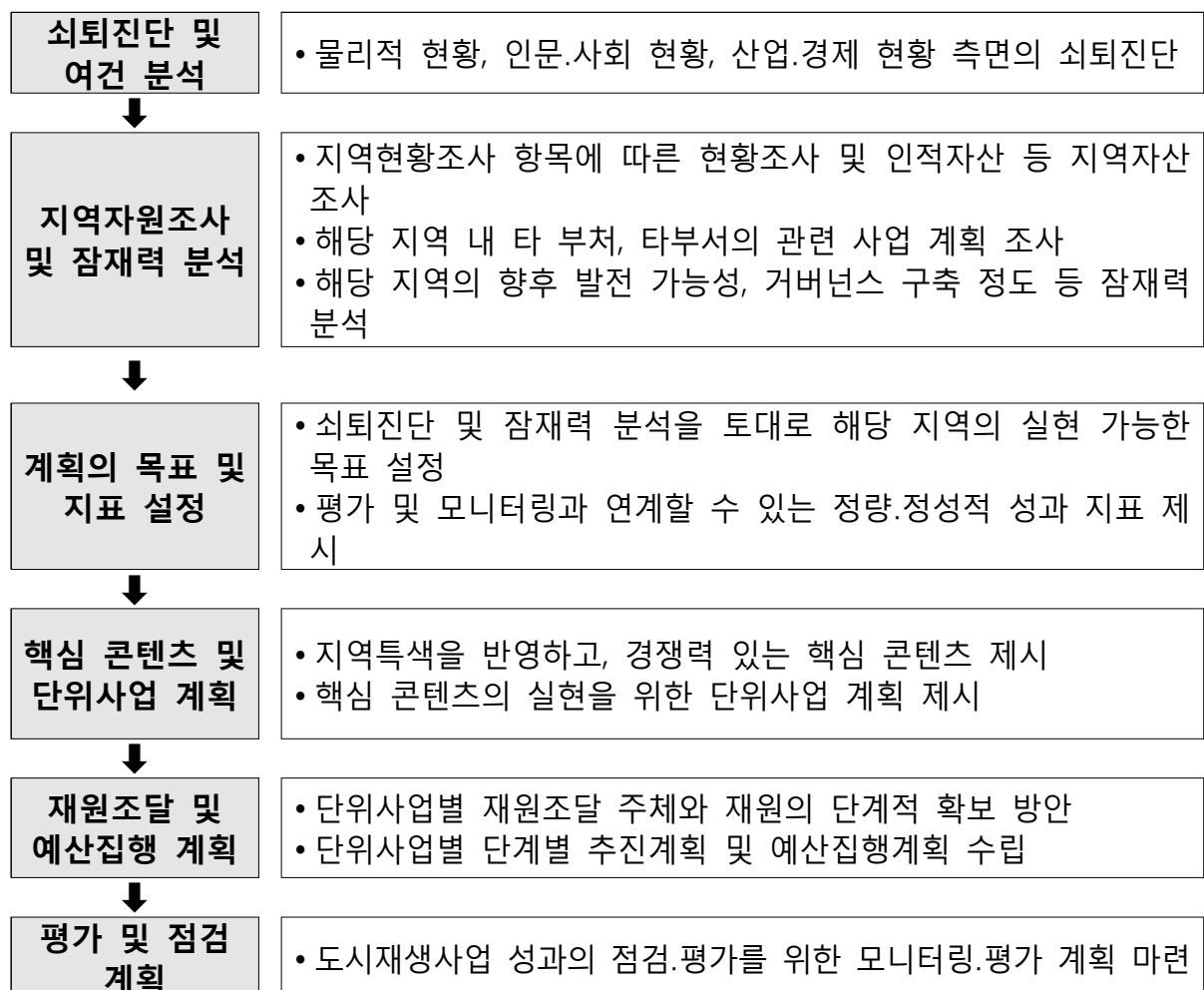
②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전담조직은 현황 진단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계획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에 대한 기초안을 도출하

고, 행정협의회와 사업추진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전담조직은 핵심 콘텐츠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행정협의회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와 부서의 사업들을 융·복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④ 단위사업까지 도출되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단위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등 평가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 활성화계획 수립 세부 절차



제2절 현황 진단

4-2-1. (쇠퇴 진단)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활성화지역의 물리적, 인문·사회적, 경제·산업적인 쇠퇴의 양상 및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쇠퇴의 양상을 기술할 때는 과거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활성화지역의 쇠퇴 원인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1. 내부요인 :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상지의 쇠퇴 양상 등의 내적 요인 등

2. 외부요인 : 해당 지자체의 외곽 또는 인접 지자체의 각종 신규 개발사업 시행, 산업구조 변화 등

④ 쇠퇴 진단 결과는 지도에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 분석 도면으로 작성한다.

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사 항목을 달리할 수 있으며 기존 통계 자료를 사용할 경우 출처가 분명한 공식 통계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4-2-2. (잠재력 진단)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조사·발굴하고, 기반시설 현황, 주거 형태, 상업 활동, 산업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사 항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기존 통계 자료를 사용할 경우 출처가 분명한 공식 통계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4-2-3. (현황 진단 기준년도) 활성화계획 수립의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기준년도의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2-4. (주민 등의 참여) ① 쇠퇴 양상 및 원인, 지역 자원과 잠재력 등 현황 진단을 위한 조사는 용역 팀 뿐 아니라 현장지원센터, 주민·상인 협의체, 일반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해당 활성화지역의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 마을만들기 학교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 등이 함께 하는 지역조사 활동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계획기법을 활용하여 주민 등의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4-2-5. (기존 조사 자료의 활용) 지역 현황 진단을 위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행한 기초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문헌·통계조사 및 측량 결과, 주민·상인 인터뷰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2-6. (전문기관의 참여)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 현황 진단을

위한 조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선정 및 발주 작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4-2-7.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활용) ① 지역 현황 진단 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지역 현황 진단 결과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 쇠퇴 및 잠재력 진단 지표 예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도시계획 현황 : 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 교통·복지·교육·문화 기능 및 시설, 기타 기반시설 현황 등(2) 건축물 현황 : 건축물 용도 및 준공시기, 공공시설 등 주요 집객시설 현황, 임대주택재고, 빈 집 수, 무허가 비율 등(3) 인문·사회현황 : 인구·가구 구성, 소득, 세대전출·입, 경제활동인구, 고령화비율, 취약계층 비율, 독거노인가구비, 범죄율, 보행량 등(4) 인적자원 현황 : 주민 조직, 상인회, 시민단체, NGO·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문화 기획자, 상권 활성화, 관광 등 관련 지역전문가(5) 경제·산업 현황 : 주택가격 및 임대료, 실업률, 공시지가, 주요 업종 및 유형별 주요 사업체수, 연매출액, 점포 임대료, 공점포수, 자영업 폐업신고 현황, 주요지점 통행량, 방문자 수 등(6) 지자체 재정 현황 : 재정자립도, 세수 현황, 부채 현황 등(7) 공공 자산 현황 : 문화재, 도시재생 사업 시행 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공공시설 건축물 등(8) 유관 사업 현황 : 도시재생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부서별 사업의 항목 및 개요 등 |
|--|

제3절 활성화계획의 목표 설정

4-3-1. (목표 설정) 활성화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에서 규정한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와 현황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3-2. (목표별 성과지표 도출)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지표는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일자리 개수, 공실률, 유동인구 등 정량적인 지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상업 활동, 고용, 도시의 중심기능 회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일반형은 주민 삶의 질 개선,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 등과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도록 한다.

(예) 성과지표 : 공실률, 고용인수,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 수, 소매점 매출 등 현장 상황 및 목표에 적합한 지표로 구성

제4절 핵심 콘텐츠의 발굴

4-4-1. (핵심 콘텐츠의 발굴)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

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콘텐츠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핵심 콘텐츠를 발굴할 때에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4-2. (주민 등 의견 수렴)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간담회,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시행하고,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콘텐츠에 대한 주민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4-3. (핵심 콘텐츠의 결정)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사업추진협의회의 논의 등을 거쳐 핵심 콘텐츠를 결정한다.

②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핵심 콘텐츠를 발굴·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구성·운영하는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핵심 콘텐츠의 결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현장지원센터에 분야별 부 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활용하거나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여 수 있다.

④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핵심 콘텐츠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절 단위사업의 시행계획

- 4-5-1. (단위사업의 발굴 및 시행계획 수립)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발굴된 핵심 콘텐츠에 따라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단위사업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단위사업 시행 계획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 일정,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단위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단위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나 시행중인 사업 등을 우선 조사·발굴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⑤ 단위사업은 여러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내의 타 부서의 사업계획 등을 조사하여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⑥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과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⑦ 기반시설의 정비 등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 ⑧ 단위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노후 취수장, 폐교, 폐철도역, 빈집, 장기방치 건축물,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중이 이용가능한 문화·돌봄·복지시설 등의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검토하여야 한다.

- ⑨ 단위사업은 물리적 사업과 지역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비 물리적 사업이 고루 발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5-2. (단위사업의 구분) 단위사업은 그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마중물사업은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부처협업사업은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 추진 중인사업과 향후 신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④ 지자체사업은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한다.

- ⑤ 민간투자사업은 상업 등 집객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주민 등의 출자 등 소규모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

구분	주요내용
마중물사업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중심의 자생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부처협업사업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사업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성격의 프로그램사업
민간투자사업	주요 집객시설 확충.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및 골목활성화 등 근린재생을 위하여 주민.상인, 토지.상가소유자, 조합, 금융기관, 사회적 기업 등 중소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 목표/성과지표- 핵심 콘텐츠-단위사업/세부사업 및 사업내용의 구분 예시

목표	○○○ 관광객을 도심관광으로 연계		쇠퇴한 ○○역 상권 역세권 활성화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관광객수 • 주요지점통행량(평일, 주말) • 빈점포활용 창업점포수,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점포(개·층) • 청년창업기업입점(개) • 일자리 창출(중사자수, 인) • 문화·예술관련 입점(개) • 행사 개최 건수(일/건)
핵심전략	중앙시장과 연계한 원도심상권활성화	○○부읍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지역내 대학생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청년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
단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활성화사업(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문체부) • 연자루 건립, 상징공간 및 상징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공간 DB 구축 및 콘텐츠 발굴사업 •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 • 문화·예술 동지조성사업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환경개선사업 • 우수구역·점포육성사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리모델링 사업위탁으로 상권 활성화 • 중앙시장의 진입로를 원도심과 연계하도록 보행자도로 건설 • 간판 정비, 선일로 가로등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부처 사업과 연계한 상징공간을 조성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사업, 문화활성화 등 추진 → 방문객 관광거점 조성 • ○○부읍성의 역사적 상징화사업으로 원일로 일대를 문화거리조성, 지역주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 도시관광요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지역내 빈 공간 실태조사 및 DB 구축, 사업을 전문업체에 8개월간 위탁, 콘텐츠 발굴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상인협의체와 연계 • 빈공간 리모델링비 지원, 청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활동 지원 등 •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해 일원동 삼거리 공터를 문화예술인 거주공간으로 조성하고, 삼원은행 빌딩 5,6층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

4-5-3. (단위사업의 주요 내용) ①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규 기능도입, 공동브랜드 개발, 시설 개선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집객시설의 도심 설치 등 원도심의 행정·상업·업무 등 도시 기능의 회복 및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단위사업을 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일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 생활환경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 근린단위 소득창출 사업 등과 관련된 단위사업을 주로 발굴하여야 한다.

4-5-4. (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 단위사업 계획은 각종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하 “법정사업”이라 한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이 경우 법정사업은 근거 법령과 담당 행정기관의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계획한다.

(예) 법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사업,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등

4-5-5. (별도 용역 시행)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단위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4-5-6. (단위사업 시행주체의 발굴)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단위사

업별 시행 주체를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단위사업 시행 주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현장지원 센터,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민관 협력 등 다양한 주체를 발굴한다.

4-5-7.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단위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수요와 입지 조건,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공유지나 공공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기반시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전체 활성화계획 및 단위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준공 후 운영 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5-8. (단위사업의 확정)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단위사업의 계획안을

주민·상인 협의체 의견 수렴, 사업추진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4-5-9. (총괄 사업계획표의 작성) 모든 단위사업을 포함하는 총괄 사업계

획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사업기간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총괄사업 계획표의 예시												
- 핵심 콘텐츠, 단위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등 제시												
(단위 : 억원)												
핵심 콘텐츠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시행주체(안) 포함)	주관 부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투자/용자)	사업 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핵심 콘텐츠	단위사업1	세부사업1	주요 사업 내용	전담조직 (국토교통부 사업)								
		세부사업2	주요 사업 내용									
	단위사업2		주요 사업 내용									
	단위사업3		주요 사업 내용	○○○과 (문화체육 관광부사업)								
	소계											
.		.										
.		.										
.		.										

4-5-10. (구상도) 활성화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핵심 콘텐츠와 단위사업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구상도를 작성하여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6절 도시계획 조치

4-6-1.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의 도시계획 조치) 중심시가지형은 원도심 공동화를 제어하고, 거주 및 유동 인구의 증가, 행정·업무·상업

및 기타 서비스 등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시계획 조치의 강구·시행에 관한 내용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중심시가지형에 대한 도시계획 조치 예시) 기존 공공시설 등 주요 기능 외곽이전 계획의 조정, 신규 공공시설의 유치, 도심 위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국공유지 및 유휴 건축자산 등의 활용, 대상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미집행도시 계획시설의 도시재생 활용, 신규 교외개발 억제 계획 등

4-6-2.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물리적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과 밀도의 변화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할 수 있다.

4-6-3.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법에 따라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을 의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6-4. (건축규제 등의 완화 조치)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최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4-6-5.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품격 있는 경관의 조성, 특정 도시기능의 증진 및 도심 공동화의 제어 등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특정 구역 및 가로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세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7절 재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4-7-1. (재원조달 계획) ①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단위사업별 재원 조달의 주체와 재원의 연차별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7-2. (국가지원 가능 여부 검토) 재원조달 계획의 내용 중 국가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사업의 명칭 및 회계단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재원 조달계획 예시

재원구분	사업 구분		주관 부서	사업비(억원)					주택도시시기금 (투자/융자)	단계별 재원 투입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계														
마중물	단위사업1	세부사업1	전담조직 (국토교통부 사업)											
		세부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3		전담조직 (중기청사업)											
												
	소계													
지자체	지자체사업1		경제진흥과											
	지자체사업2		관광진흥과											
	소계													
부처협업	부처협력사업1		문화예술과 (문체부사업)											
	부처협력사업2		건축과 (국토부사업)											
	소계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											
	소계													

*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항목 추가 가능

4-7-3.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활성화계획수립권자는 도시 재생사업 간, 도시재생사업과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들의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예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계별 추진계획]																			
연도 사업				00년				00년				00년				00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 전략 사업 1	마중물	단위 사업1	세부사업1 (우선추진 대상사업)		▲ 착공		▲ 조직 참여		▲ 사업 운영										
			세부사업2		▲ 조직 구성		▲ 사업 운영												
	지자체	○○○ 단위사업2				▲ 착공		▲ 사업 운영											
	부처 협업	○○○ 단위사업3										▲ 조직 구축		▲ 사업 운영					
	· · ·	· · ·																	

* 활성화계획수립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장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5-1. (활성화계획의 모니터링·평가계획)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법 제24조와 시행령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 실적 평가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5-2. (모니터링·평가계획의 주요 내용) 모니터링·평가계획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성과 지표, 그리고 성과 지표의 측정·평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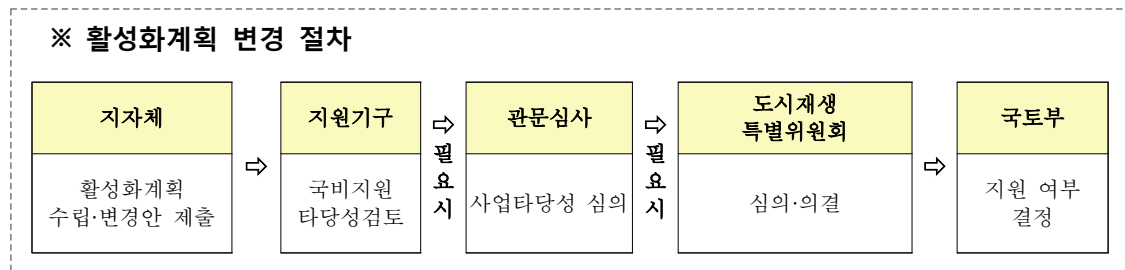
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5-3.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각 성과 지표 별로 조사 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 측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활성화계획의 변경 및 기타 사항

- 6-1. (사전 협의)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활성화계획의 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검토, 주민·상인 협의체의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협의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 6-2. (세부사업의 변경)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대하여는 지원기구에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다.
- 6-3. (단위사업의 변경)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단위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성·운영하는 관문심사위원회의 관문 심사를 거쳐야 한다.
- 6-4. (중요 사항의 변경) 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는 핵심 콘텐츠의 변경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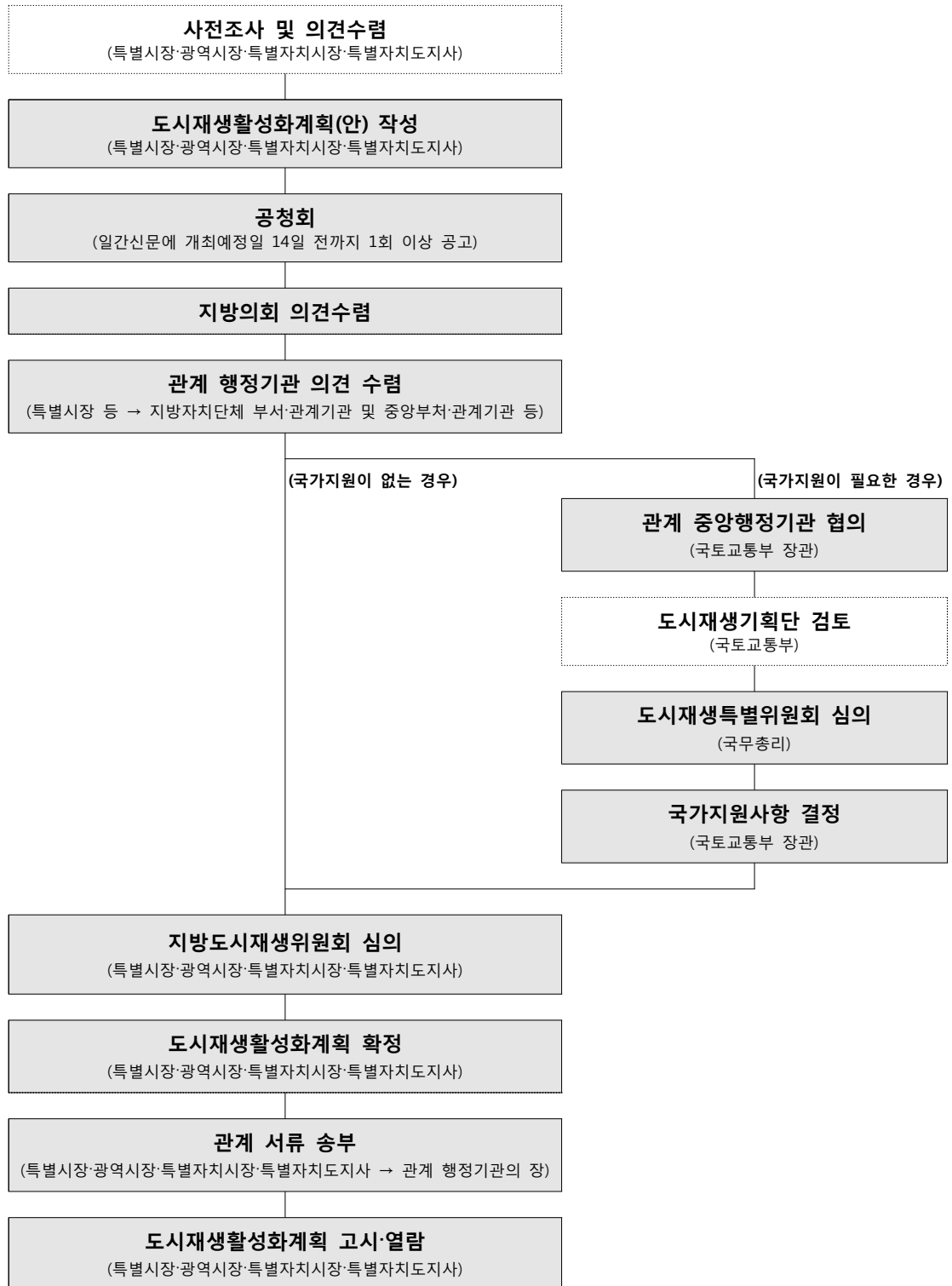
쳐야 한다. 국비 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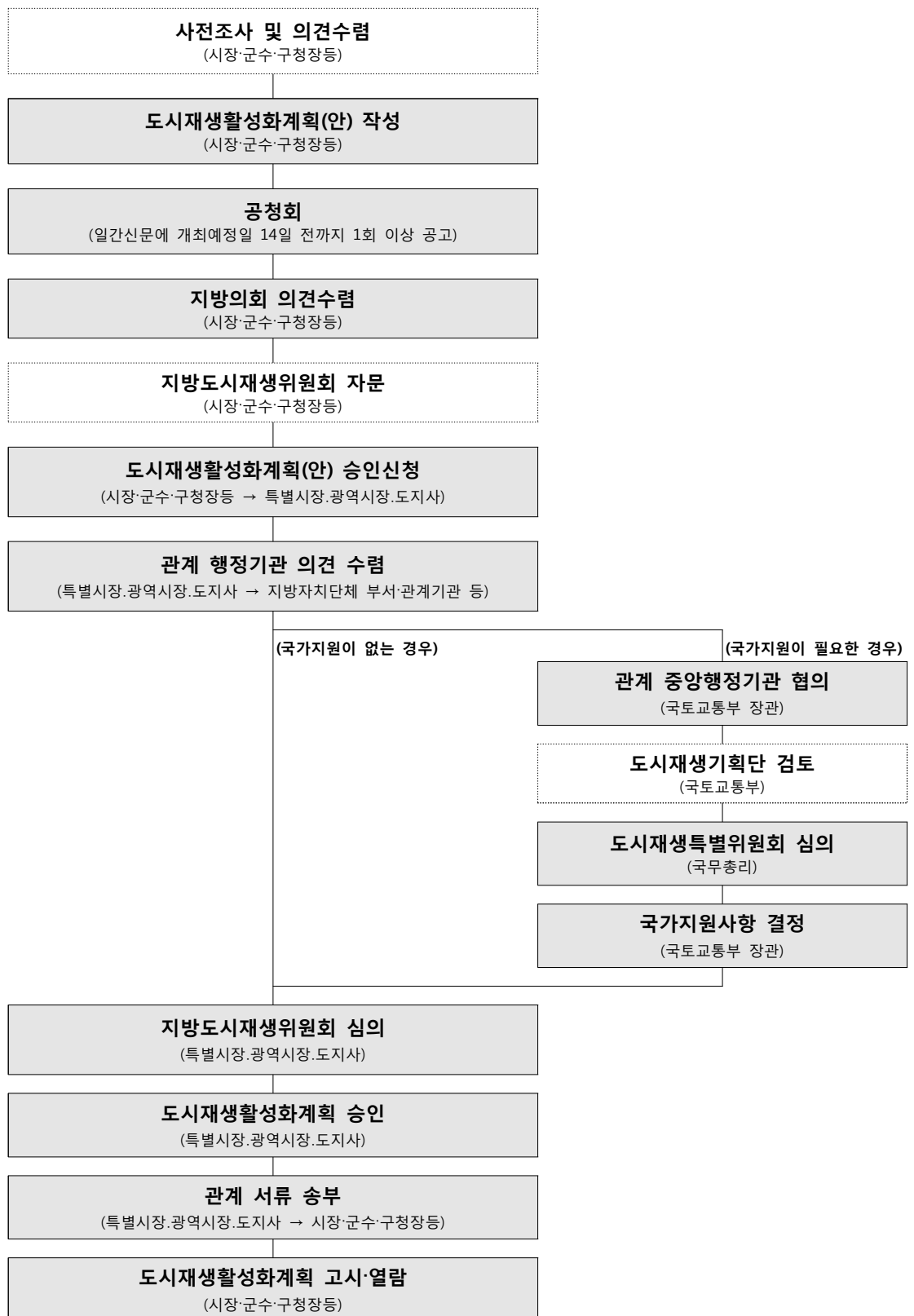
6-5. (참고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에서 지난 도시재생 R&D 성과물,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 등 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시스템(www.codil.or.kr), LH 도서관(library.lh.or.kr/lib), 국회도서관(www.nanet.go.kr)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붙임 1

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도



[그림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권자인 경우



[그림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수립권자인 경우